



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개정안 국회 통과

- 사업재편 상시법 전환 및 공급망 안정 사업재편 신설 등 체질 개선 보강

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(이하 ‘기업활력법’)」 개정안이 12.20.(수)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. 기업활력법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, 공급망 재편 및 환율·금리 불확실성 등에 따른 한계기업 증가 등 복합 위기 아래에서 우리 기업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사업재편 추진을 위해 발의되었다.

이번에 개정된 기업활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 ①'24.8.12 일몰 예정인 현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한다. 향후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선제적 사업재편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②공급망 안정 목적의 사업재편을 신설한다.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등과 연계한 지원을 통해, 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 강화를 촉진한다. ③상법 절차 간소화 및 공정거래법 규제 유예 등 특례 적용범위도 디지털 전환·탄소중립·공급망 안정 등으로 확대하여, 신속한 산업체질 개선을 지원한다. ④사업재편 협력 생태계도 강화한다. 거래·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 평가 등의 우대를 지원하여, 민간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한다. 권역별로 수요발굴부터 금융·연구개발·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 맞춤형 사업재편 지원 역시 추진한다. 기업활력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,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.

그간 기업활력법은 중소·중견기업과 비수도권 소재 기업 중심으로 427개사의 사업재편을 지원하였으며, 이를 통해 '28년까지 약 2만 여명의 신규 고용과 37조원에 이르는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. 정부는 사업재편 성과 추진을 위해,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, 경제단체·금융기관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산업정책관	책임자	팀 장	김태형 (044-203-4230)
	산업정책과 기업정책팀	담당자	사무관	안용열 (044-203-4231)

1. 추진 경과

- (산중위) 4개 개정안*을 토대로 위원회 대안 의결('23.11.30)

* 박수영 의원('23.8), 신영대 의원('23.9), 구자근 의원('20.9), 강기윤 의원('20.10)

- (법사위) 전체회의 안건 상정 및 의결('23.12.19)

- (본회의) 안건 상정 및 의결('23.12.20)

2. 주요 내용 : 적용기한, 대상, 범위, 지원체계 대폭 보강

- (적용기한) 한시법('24.8월 일몰 예정) → 상시법

- (적용대상) 과잉공급 해소, 산업위기지역 대응, 신산업 진출 등 제한적
→ 디지털 전환·탄소중립('24.3월 시행) 외에 공급망 안정 신설

- (특례범위) 과잉공급 해소, 산업위기지역 대응에만 적용되던
상법·공정거래법 특례 범위를 모든 사업재편으로 확대

* (상법) 간이합병, 소규모 합병시 절차 간소화 (주주총회 의결 → 이사회 승인)
(공정거래법) 자회사·손자회사 지분규제(상장 30%) 등 유예기간 연장 (최대 5년)

- (지원체계) 산업별·권역별 지원체계 보강

- 대기업이 협력 기업들의 사업재편 지원시, 동반성장 평가 및
공정거래 협약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
- 권역별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(지역상의, 지역은행, 테크노파크 등)를
구축해 수요발굴, 금융·컨설팅·기술지원 등을 밀착 제공